

	독일 ( 프 랑 크 푸 르 트 ) 사 무 소 <b>해 외 동 향 보 고 서</b>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훈희 소장
		일 시	2025. 4.

### CEPA Insight

- EU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보복 조치 시행 등 강경 대응 시사
  -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고조

#### ① EU 의회,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법 시행 연기 승인

- 유럽 의회가 지난 3일,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(CSRD)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(CSDDD)의 시행 일정을 늦추기로 합의
  - 의회 투표에서 찬성 531표, 반대 69표, 기권 17표로 압도적 지지
- 위원회는 2월에 '옴니버스 패키지'라는 포괄적인 수정안을 발표하고
  - ① 시행 일정 연기 안, ②규제 간소화 안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입법 추진 중이며, 이번 표결은 ①시행 일정 연기 안에 해당

구분	변경내용
CSR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회원국 입법 전환) 기존 '26. 7. 26 → '27. 7. 26, 1년 연장</li> <li>• (기업 적용 시기) 기존 '27.7.26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. '28.7.26일부터 매출액 9억 유로 초과 기업에 적용된 후, '29.7.26일부터 CSDDD 적용 대상 기업에 전면 적용</li> </ul>
CSDD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Wave 2,3 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 2년 연기</li> <li>- wave 2(비상장 대기업) 보고 시점 '26년 → '28년('27년 회계연도 대상)</li> <li>- wave 3(상장 중소기업) 보고 시점 '27년 → '29년('28년 회계연도 대상)</li> </ul>

- EU 회원국은 확정된 일정을 '25.12.31일까지 자국법으로 전환 필요
- 다만,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CSRД·CSDDD 규제를 완화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\*되어 있어, 역내 정치적 갈등이 큰 상황
- \* CSDDD(실사 범위 축소, 모니터링 주기 연장, 기후 전환 계획 이행 의무 삭제, 민사책임 완화 등), CSRД(대상 기업 및 보고 의무 축소 등)

※ 출처 : **유럽의회**(<https://www.reuters.com/world/world-leaders-react-trumps-global-tariffs-2025-04-02/>)

## ②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EU의 반응

-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, 트럼프 대통령이 EU 상품에 20% 관세를 부과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보복 조치 예고(4.3.)
  - 집행위원장은 'EU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'며 미국에 '대립에서 협상으로 나아갈 것'을 촉구
- EU는 미국의 철강·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260억 유로 규모의 첫 번째 보복 조치안을 최종 조율 중으로
  -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 값싼 중국산 제품과 기타 국가의 수출품이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EU 시장으로 몰려들 가능성을 경계
- 네덜란드 ING 은행은 4. 2일(수), 유로존 GDP 성장률을 하향 발표
  - '25년의 경우 기존 0.7%에서 0.6%로, '26년에는 1.4%에서 1%로 조정
  - 또한, 관세가 무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외에, 소비심리와 투자 위축 등 유럽 소비자와 기업에 미칠 2차 파급 효과도 우려

※ 출처 : **유럽의회**([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statement\\_25\\_964](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statement_25_964))  
**Politico**(<https://www.politico.eu/article/eu-vows-to-retaliate-against-trumps-20-percent-tariffs/>)

## ③ EU, 유럽 철강·금속 행동계획 발표

- EU 집행위는 기후 중립 전환과 동시에 독일과 유럽의 철강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.19.(수) 유럽 철강·금속 행동계획을 발표
  - 값싼 수입 철강의 대량 유입,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리스크 대응을 위해 내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%까지 감축하는 무역 보호 조치 포함
- 지난 10년간 EU 철강 시장의 해외 수입(극동아시아 중심)은 약 3배 증가
  - 미국의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로 EU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 예상
- 독일 철강업계는 동 계획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로
  - 유럽은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불공정 무역에 대응해야 하며, 철강 산업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

※ 출처 : **독일철강산업협회**(<https://www.wvstahl.de/pressemitteilungen/european-steel-and-metals-action-plan-wegweisendes-signal-der-eu-kommission-jetzt-muss-umgesetzt-werden/>)  
**Tagesschau**(<https://www.tagesschau.de/wirtschaft/unternehmen/eu-zoelle-stahl-hilfe-100.html>)

#### ④ 독일 연방하원, 사상 최대 규모 부채 패키지 승인

- 독일 연방하원은 3. 18, △국방비 지출에 대한 부채 제한 규정 폐지, △5,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투자용 특별예산 편성, △연방주의 독자적인 부채 발행 허용 등이 담긴 기본법 개정안 통과
  - 메르츠(Merz) 차기 총리는 이번 결정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에 대한 안보 위협을 고려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강조
- 한편, 동 결정에 대해 독일경제연구소(IW)는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경고
  - 정부가 부채를 기반으로 지출 확대 시, 해당 지출로 발생하는 추가 수요를 기존 공급 능력이 감당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
  - 또한, IW는 재정 패키지로 인해 독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현재 63%에서 2037년까지 85%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
- IW는 재정 지출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
  - △충분한 노동력 확보, △사회보장 지출 절감, △규제 및 관료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, 이를 위한 구조 개혁 추진을 촉구

※ 출처 : **DW**(<https://www.dw.com/de/abstimmung-bundestag-schuldenbremse-heute-live-sondervermoeigen-grundgesetzaenderung-schuldenpaket-v1/a-71962704>)  
**Tagesspiegel**(<https://www.tagesspiegel.de/wirtschaft/potenzial-eine-inflationsdynamik-hervorzurufen-okonomen-warner-vor-risiken-des-finanzpakets-13414831.html>)

#### ⑤ 독일 정부, 2030년까지 기후목표 달성 가능 예측

- 연방환경청(UBA) 및 연방경제기후보호부(BMWK) 발표(3.14.)에 따르면, '24년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3.4% 감소한 6억 490만 톤
  -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배출량 6억 9,340만톤을 크게 밑도는 수준
- UBA는 현재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경우 '30년까지 '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5%까지 감소시킨다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측
- BMWK와 UBA는 전력 생산 분야에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으로써 에너지 업계가 지난해 배출량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
  - 반면, 운송, 건축 분야는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

※ 출처 : **Stern**(<https://www.stern.de/news/emissionen-2024-um-3-4-prozent-ge-sunken---klimaziele-bis-2030---erreichbar--35551234.html>)